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 신뢰와 협동의 경제

송미경 연구원 요약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행사명 :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The 6th Future Forum)
- 주 제 :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
(New Balancing for New Asia: New Economy with Trust and Cooperation)
- 일 시 : 2015. 10. 28(수)~29(목)
- 장 소 : 웨라톤그랜드워커힐(B2)
- 주 최 : 한겨레신문사
- 주 관 :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01 개요

‘아시아미래포럼’은 세계의 변명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아시아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그동안 ‘동아시아 기업의 진화’ ‘대재앙 이후의 아시아: 책임과 상생’ ‘리더십의 변혁’ ‘포용성장 시대: 기업과 사회의 혁신’ ‘사람중심경제: 기업과 사회의 협력’ 등 여러 가지 담론을 논의해왔고, 올해에는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5년 포럼의 기조연설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

을 넘어’라는 주제로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정치경제학 명예교수인 로버트 스킨델스키(Robert Skidelsky)와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의 자야티 고시(Jayati GHOSH) 교수가 발표하였다. 영국의 로버트 스킨델스키 교수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이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인도의 자야티 고시 교수는 오늘날 아시아 신흥국을 포함한 소위 ‘이머징마켓’들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해법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세계 경제 영향력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중국의 정책 및 경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The Institute of Economics, China Academy of Social Science) 소장 페이창홍(PEI Changhong)을 모시고 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중국 세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 세션에서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주요 도시의 발전 과제와 지역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을 좌장으로 중국도시개발센터,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연구센터,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경기도 시흥시, 충남연구원 대표가 각 도시의 당면과제와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노력을 보여주었다.

본 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세계 및 아시아의 경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기초연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밖에 중국 세션, 종합 세션의 주요 발표내용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02 기초연설 :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넘어

중국의 신실크로드는 꿈일까, 실현 가능한 현실일까?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이번 포럼 주제는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로 다시 부상하지 못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세계 각국의 GDP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무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끈 엔진이다. 따라서 무역 감소는 지금까지 발달한 국제 및 경제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신실 크로드 정책은 중국 내부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할 해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위기

최근 중국은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전 세계 무역규모가 더디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경상수지는 2007년 GDP의 10%에서 2015년 3%까지 수치가 하락했다. 2015년 6월에는 상하이와 선전의 종합지수가 각각 고점 대비 30%, 40%가량 하락하며 세계금융 시스템을 동요시켰다. 주식이치로 약 3조 달러 규모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2015년 8월 방어적 차원에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전 세계 주식시장과 부동산 부양에 큰 타격을 안겼다.

중국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2004년부터 수출·투자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구축된 경제발전 체계가 낡은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체제 개편의 리스크가 높아 쉽게 실행하지 못해왔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제발전 체계를 지속해왔다. 우선, 수출 증대를 위해 중국 환율을 평가절하해왔고, 중공업 관련 공기업을 성장시키고자 가구별 저축률을 독려했고,¹ 금융시장의 금리를 매우 낮춰 공

기업에 저축자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역동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비효율적이고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대규모의 저축자금이 유실되었고, 금융시장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손실 높은 공기업에 계속 투자해온 공인 은행들은 위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림자은행(사은행)의 성장이다. 신탁회사 산하에서 빠르게 성장한 사은행은 높은 이율로 공인은행의 저축자금까지 끌어들이었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국내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중국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놓았다.

물론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은 오늘날 중국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전 세계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사은행의 발달로 금융관리국이 정책적으로 신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공인은행의 예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HK 이코노미스의 취로하스는 '삼위일체 불가능이론(impossible trinity)²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현 시스템을 개혁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환율 안정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해법과 신실크로드 전략

그럼 중국은 중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신실크로드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내수 기반 경제에 요구되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중상주의 전략으로 전개하리라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복

합적인 의도가 있다.

① 중국의 경제 개편에 따른 타격을 완충할 중기적 해법

우선 신실크로드 정책은 중국이 투자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중기적 해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이 인프라 및 건설 분야에 공공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니트(EIU)'도 중국이 철강과 중장비 산업의 과잉생산을 대체할 수단으로 신실크로드 건설을 내세웠다고 분석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재원을 축적하고 있어 중국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할 지역 인프라 개발 붐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중국 중심의 글로벌 정치·경제 체제 강화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국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범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의체를 만들고 한국·일본·타이완·필리핀·호주·인도 등 중국 주변국들이 이에 참여하자 중국은 미국의 경제권역에 포위된 양상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를 따라 지역 경제권 간

1 2005년 중국의 가구별 저축률은 GDP의 50%, 가구별 소비는 GDP의 38%

2 국가는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안정, 자유로운 자본이동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

중국의 5대 개발지역

- ① 북서 지역 : 신장(Xinjiang)을 교통, 무역 및 물류 허브로 하여 아시아 중부, 남부, 서부의 국가들 연결
- ② 남서 지역 : 광시(Guangxi)를 거점으로 아세안과 경제적 연계성 강화. 주강(Pearl River), 시창(Xizang)³, 베이부만(Beibu Gulf)⁴과 윈난(Yunnan) 지역을 잇는 국제 교통 코리도어를 만들어 중국과 대 메콩강 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GMS)을 연결
- ③ 동북 지역 : 네이멍구에 하이룽장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 ④ 북동 지역 : 충칭을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 허브로 중국과 유럽 경제권을 잇는 철도 교통 중심지로 발전
- ⑤ 해안 지역 :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양쯔 삼각주(Yangtze River Delta)과 주강 삼각주, 대만해협(Taiwan Trait)과 발해만(Bohai Rim) 경제권으로 통합. 푸젠(Fujian)을 해안 신실크로드의 경제 허브로 발전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신실크로드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육로와 해로로 중국과 유럽을 잇는 동시에 원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4년 5월 26일 중국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약을 체결하며 앞으로 30년간 러시아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4,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우주협력기구(Asia 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APSCO),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몽골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이 우주협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③ 서부지역 발전의 전략적 방안

신실크로드는 200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고웨스트(GO WEST)’ 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중국 동부 연안에 집중된 투자를 서쪽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서부의 저개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담겨

그림1 중국의 주요 지역권



자료 Robert Skidelsky, 2015, The New Silk Road: Dream or Reality?, Asia Future Forum, Seoul 28-29 October 2015, Hankyoreh

그림2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성



자료 Robert Skidelsky, 2015, The New Silk Road: Dream or Reality?, Asia Future Forum, Seoul 28-29 October 2015, Hankyoreh

3 티베트(Tibet)의 중국어 표기
 4 통킹 만(프랑스) 또는 박보 만(베트남)을 뜻하는 중국어 표기

있다. 이미 중국 동부 지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자 생산기지들이 서부 지역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실크로드는 이러한 수요를 수용함으로써 중서부 주요 지역에 인프라개발 붐을 일으킬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기저에는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구조 개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방식은 대형 공기업이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뒤따르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신실크로드를 따라 대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개발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편의적 협력관계 : 러시아와 영국

①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유라시아의 발전에 대한 분명한 경제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 다변화와 현대화에 실패하며 여전히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제조품을 수입하는 경제구조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러시아가 석유제품 소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또한 대규모의 교통 및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라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고, 체제 붕괴 이후 무너진 러시아의 공학기술을 부흥시킬 기대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권 연합을 더욱 자율적인 정치·경제 연합으로 재구성하고자 2015년 1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 Economic Union)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5월 8일,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신실크로드 경제벨트(SREB)를 통합한 '대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상 전략을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구상을 바탕으로 양국은 정치적 기구, 투

자기금, 개발은행, 통화 및 금융개혁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동서로 미국 경제권에 의해 막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무역·정치·안보 측면의 협력을 통해 외부의 관여에 취약한 현 상태를 개선한다는 데 협의했다. 그동안 두 국가는 중앙아시아의 권력과 영향력을 놓고 대치해왔으나, 서구의 성공적인 정치력 덕분에 이제는 서방을 제외한 미래 개발이라는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미국은 그간 IMF를 개혁하고자 하는 중국의 계획에 반대했고,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NATO)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단일화된 국제 체제에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이지만, 당분간 두 국가는 서구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서로의 간섭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② 중국과 영국

최근 시진핑 주석의 영국 순방, 그에 앞선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 영국의 협력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아편전쟁과 영국의 홍콩 지배라는 역사적 문제로 영국에 대한 중국의 감정은 좋지 않은 편이었고, 영국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그러나 영국의 보수정권은 이상보다는 현실을, 중국은 역사보다는 현재의 요구를 우선순위로 선택한 듯하다.

영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비교적 한정적이다. 영국은 대중국 수출을 늘리고 교통 인프라와 원자력 분야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런던시를 중국의 해외자본을 관리하는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입장이다. 2009

년 이후 영국의 화폐가 30% 평가절하되면서 현재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에 달하게 되었고, 영국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유럽은 지속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의 자본 유입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자국민의 저축자금 대신 중국의 저축자본이 유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反) 포위전략의 일환으로서 영국을 이용한 유럽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신실크로드의 실현 가능성

결론적으로 신실크로드는 무역 확대를 원하는 전 세계의 경제개발 패턴과 내수 확대를 지향하는 중국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실크로드가 유럽연합(EU)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처럼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자면 첫째, 신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국제무역 규모가 유럽과 미국이 이끄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규모보다 작으며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규모도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신실크로드 선상의 국가들은 제도적 발전이 미흡한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정치·군사·경제 등의 전 분야에서 협력을 이룬 사례도 드물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신실크로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실크로드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대 독재정치의 연합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정권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주요 결절점에서 무역의 발달이 아닌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개별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라기보다 편의에 따른 일시적 협력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모두 외부와의 연계성이 강한데다가 카자흐스탄과 같이 신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의 전략은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된 형태지만, 사실 러시아는 이미 유럽에 대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강국이기에 때문에 중국보다는 유럽 및 미국 간 대화를 택하는 편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 필요한 대규모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므로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유라시아는 거의 비어 있는 지역도 많고, 거주인구가 적으며, 척박하다는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즉 자원 외의 자연적 장점이 별로 없다는 점은 무역과 투자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부분이다. 영국과 중국도 결국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지는 못한 채 주변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실크로드는 중국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자 세계의 미래 구상에 관한 제안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신실크로드가 또 다른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가 확장되고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연계요소 중 하나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머징 마켓은 계속 발전하고 있나?

과연 발전이란 무엇인가?

자야티 고시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교수

오늘날 전 세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경제가 퇴보하고 있다. 2015년에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신흥시장이 순자본 유출을 기록할 예정이다. 2014년에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순자본 유입이 140억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무려 5,400억 달러 규모의 순자본 유출이 예상되는 올해의 상황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신흥시장의 민간자본 유출액은 2015년 8월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일부 신흥시장은 기존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몇 년 전까지 빠른 성장으로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를 넘어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신흥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이 빠르게 반전되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흥시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신흥시장의 추락이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신흥시장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최초의 기대나 장기 침체될 것이라는 최근의 전망 모두 극단적으로 과장된 것으로,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시장의 발전을 기대하게 했던 그 강점이 이제는 미래 성장의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흥 경제의 부상과 위기(boom and bust)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이 잘못 해석되었을지도 모른다.

신흥시장의 의미

‘신흥시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혹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의 공식적인 의미는 다르다. 맨 처음 ‘신흥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세계은행 산하에서 민간투자를 담당하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가 1981년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⁵를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더 많은 개발도상국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 금융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의미가 담론화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흥시장을 “고수익과 고위험을 수반하는 개발도상국을 가리키기 위해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의하면서, 때때로 글로벌투자지표(Global Index) 개발자들은 비교적 부유하지만 경제 제도가 충분치 않은 국가를 이 범주에 넣는다”고 하였다. 즉 ‘신흥(이머징, emerging)’시장의 진짜 의미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흐름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 자유화를 진전시킨 시장이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에 통합되었거나 그러할 것으로 투자자가 인식한 시장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신흥시장은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신흥시장의 ‘부상(emerging)’이란 사실상 금융 자유화와 글로벌 자본시장으로의 통합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본래 경제발전이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생산구조가 다변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 자유화와 글로벌 자본의 유입은 신흥시장의 생산

5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를 말한다. 법인회사는 모집된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운용 회사에 맡기고 추후 그 운용 수익을 운용회사로부터 받아서 원래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되돌려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회사라고도 불린다.(시사경 제용어사전, 2010, 기획재정부)

구조 다변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의 발전 역량을 감퇴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장 연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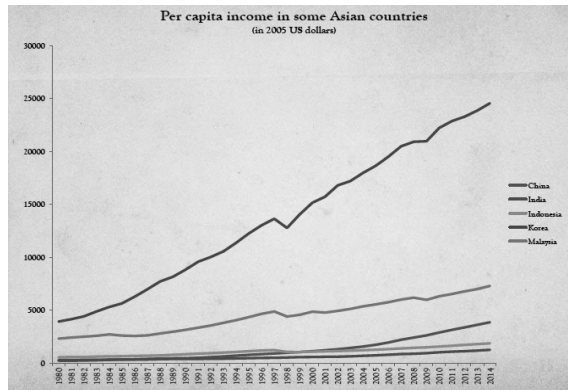
경제의 성장 과정

전통적인 개발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과 생산구조의 개혁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산업화는 이러한 개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산업화는 1인당 소득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통적인 개발경제학자들은 판단했다.

이러한 쿠즈네츠(Kuznets) 식의 구조개혁을 이룬 ‘고전적인’ 실례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경제발전의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1차 산업의 생산과 고용 비중이 꾸준히 떨어졌다. 초기, 즉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비중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경제 규모도 중소득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어느 지점부터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신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2000년대 중반에 이르자 서비스업이 총 고용의 73%, 총생산의 54%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1인당 소득도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였다(그림3,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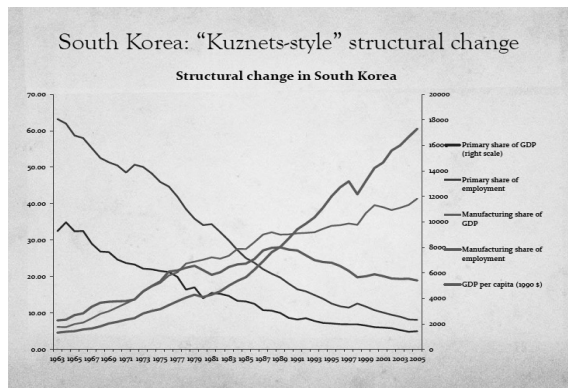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다변화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국가 주도의 수출 지향으로써 자본 축적에 성공한 모델로만 봐선 안 된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정부가 국가의 금융을 통제하고 자금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금융 자유화 이후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림3 한국과 아시아의 1인당 소득 비교



자료 Jayati Ghosh, 2015, Are “emerging markets” still developing? And what is development anyway?, Asia Future Forum, Seoul 28-29 October 2015, Hankyoreh

그림4 한국의 쿠즈네츠(Kuznets)식 구조개혁



자료 Jayati Ghosh, 2015, Are “emerging markets” still developing? And what is development anyway?, Asia Future Forum, Seoul 28-29 October 2015, Hankyoreh

금융 자유화의 한계

금융 자유화가 생산구조의 개혁을 방해하여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자유화는 개발도상국 내부의 금융 취약성을 증대시켜 금융위기와 통화위기에 주기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금융 자유화와 개방은 금융 시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고 독과점의 발생을 높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과 같이 예민한 분야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특정 분야와 대상에게 대출 및 투자가 편중될 수 있으며, 규제에 대한 예외나 유예 경우가 늘어난다. 또한 종합은행(universal banks)과 금융백화점(financial supermarket)의 등장으로 금융 시스템 내의 주체들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별 금융시장의 실패가 도미노처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금융시장의 금융정보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의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 없이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 주주들은 기업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데 개인의 돈과 시간을 쓰기를 꺼린다. 금융회사도 비용을 줄이거나 없애고자 이미 성공한 금융회사의 투자 행태에 따르곤 하는데, 이를 ‘떼거리 본능(herd instinct)’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제 주체는 금융 혜택에서 배제되고 어떤 경제 주체는 신용이 과대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대출 과다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정보의 외부성(informational externalities)이 만연해졌을 때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은행이 도산되었을 때 다른 은행의 예금자들에게도 불안이 전파되어 연쇄적인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셋째,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불일치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는 현상이 전개될 수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 분야의 대출이다. 이 분야는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대출에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그 담보로 은행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칫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출

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최초의 대부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금융기관은 그에 따른 위기를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과다차입과 과잉대출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투기를 더욱 부추김으로써 마침내 거품 붕괴와 은행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불완전한 시장에서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금융 중개기관과 비금융 기업이 유착하여 과점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conglomerates)에 속해 있는 금융 중개기관은 계열사의 신용을 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개입보다 더욱 비효율적인 신용 배분이라 할 수 있다. 금융 자유화로 새로운 형태의 예금을 늘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국내 총 저축은 크게 증가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금융 자유화는 금융 자원의 조달과 운용을 장기적으로 성숙시키기보다는 예금이나 대출을 6개월 미만으로 단기화한다. 또한 주식 시장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그 자금이 기업을 위한 신규 자본이나 벤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소액 투자자들은 사기나 조작 등을 우려한 나머지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장기 목적의 투자 세력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런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 성과는 전체 시장의 양적 확장이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는 무관해진다. 이 상황에서 대외적 금융 자유화로 외부자본까지 유입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마련이다.

금융 자유화에 따른 신흥시장의 경제 변화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처로 ‘선택’된 신흥시장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대체로 환율 변동이 발생된다.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대체로 부동산 같은

비교역제, 일반적으로는 자산시장 투자가 증가한다. 반면 통화 가치 상승으로 교역제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체 실물경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심한 경우 일부 신흥국의 탈산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내외 금리 격차가 있는 나라에서 대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전진성을 지키지 못하면 자국 내 경제 주체들은 자산·주식시장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외 자금을 무분별하게 차입하게 된다. 모든 신흥국에서 실물경제가 정체하거나 축소하고 있는데도 엄청난 외부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대변한다. 물론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전체 수요를 활성화시키고 특정 부분에서 일정 기간 높은 매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아니라 민간수요의 무분별한 부채 그리고 의존형 투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더 위험한 점은 국제적으로 유동적인 금융자본이 대량 유입되었을 때 경제를 후퇴시키는 작은 요인만으로도 이 자본은 대량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본계정과 연계된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의 외화보유액이 크지 않은 이상 아무리 사소하고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요인이라도 좋은 않은 시장 평가로 이어져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오늘날 주류에서는 신흥시장의 거시경제가 불균형해진 원인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자와 자본계정의 적자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제멋대로인 상황에서 국가는 자본의 유입량이나 유출량을 통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움직임도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유입 급증의 불가피한 부산물이

며, 바로 여기에 거시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이는 어떤 국가라도 민간자본의 흐름에 일정한 통제나 조율을 할 수 없다면 유사한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금융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물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거시경제를 편향시키게 된다.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수단도 대폭 제한된다. 이전의 무역 자유화가 이미 과세체계를 약화시켜놓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금융 자유화는 일반적으로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총조세액 비중)을 더 떨어뜨린다. 이것은 정부지출의 제한으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자본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 자유화는 국가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정책 여지를 줄여놓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제 성장에 필요한 개발정책을 펴는 데도 제한이 뒤따른다.

이처럼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은 두 가지 경로로 실제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투기적 거품이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면 유동성 제약과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고용과 생활수준까지 떨어뜨리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계투자수익률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 분야 차입자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른다. 그래서 농업과 제조업 투자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나 빈곤 완화에 더 기여한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적정 수준의 신용 공급이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 자유화가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금융 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데 있다. 금융 분야가 규제받지 않고 방치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된다면 가용 투자재원의 배분은 시장이 결정하

기에 이른다. 또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저축에 대한 수요와 배분도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전체적으로 저축과 투자가 사회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배분되는 꼴이다. 이로써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수입 의존적인 영역인데도, 단지 높은 수익만을 쫓아 신용이 몰리는 금융시장의 내재적 경향은 더욱 악화한다. 그 결과 투자 기금은 소수의 대형 운용자들에게 몰리고, 저축 자원은 이미 경제력이 성숙한 중심 분야로 집중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요청인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은 점차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흐름은 농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노동집약적 분야에 곧바로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대출의 거래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위험이 많고 담보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정책 금융을 통해 특정 분야의 성장을 일정 궤도에 오르게 하는 중기 전략을 제약한다.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험

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1990년대 초반, 거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금융 부문을 자유화하면서 국내 기업과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국제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공통적으로 1993~1996년 사이 주식시장 과열과 더불어 자산·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빚었다. 이러한 자산시장의 호황은 국내 수요와 경제규모를 상당히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소득증가를 불러왔다. 하지만 곧 거시경제에 불균형 신호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가 아닌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민간수요 확대가 부채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결과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그간 실질적인 경제성장 근거에 있던 수출 주도 성장모델까지도 위협했다. 그에 따른 투자자의

신회 붕괴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1997~1998년, 아시아에 위기가 닥치자 자본은 유출되었고 통화가치는 절하되었다. 장차 달러화로 자금을 갚아야 하는 이들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자 서둘러 달러화를 구하기 위해 시장으로 달려들었다. 유동성 부족과 부도가 도미노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사태는 심각해졌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더 놀라운 결과는 이러한 위기가 사실상 금융 자유화 과정을 강화시키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소유와 통제를 높였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역내의 다른 ‘신흥시장들’에서도 관찰되었다. 더욱 비정상적인 것은 경제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국내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투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 경제는 더 이상 외국저축의 순수취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순수출이라는 정반대 경향을 보이게 된다. 저축이 자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된 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얘기가. 자본 유출 또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라는 형태로—이것은 보통 (미국 재무부 채권 같은) 매우 안전한 국외 자산으로 보유된다—사실상 외부로 수출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위와 같은 추세를 가장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두 국가는 1년 여 전까지도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신흥경제를 보이고 있다며 칭송을 받았다. 두 국가의 경제는 상당히 다르고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정책의 내용도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아시아 위기 이전에 수출 중심의 성장모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과 금융 자유화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금융 자유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95년 국제 무역기구(WTO)에서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관련된 협정을 맺으면서 특히 추진력을 얻었다. 아시아 경제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몇 년간 두 나라의 투자율이 모두 꾸준

히 높아졌고, 상승 수준도 저축률을 증가했다.

아시아 위기 이후 두 나라에서 투자는 급전직하였다.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는 저축률이 점차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높아지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도 비록 최근에 투자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2년 전엔 겨우 저축률을 따라잡은 정도이다. 투자율은 주식 시가총액이나 민간부문에 제공된 신용액 등과 같은 금융지표들과 무관하게 움직였다. 달리 말하자면 ‘신흥시장’에서 최근 벌어진 금융적 호황이 실물투자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부가가치 및 고용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각각 정체되거나 감소한 사실이다. 즉, 두 나라 경제의 구조적 발전이 멈추었거나 반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서구의 선진경제가 아닌 일인당 소득이 훨씬 낮은 나라에서 나타났다. 두 국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상하는 신흥시장’이라는 축포를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실상 외국인 저축의 순수취자이길 멈췄고, 자원의 순수출 경향이 시작되었다. 높은 저축률과 낮은 투자율은 성장률 저하로 이어졌고, 생산구조와 부문별 다변화라는 바람직한 변화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약화되었다. 전체 과정은 소비자 신용과 주택금융의 팽창을 부추김으로써 부채로 조성된 거품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자기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성장 엔진인데도 말이다.

② 중국과 인도

물론 같은 신흥시장이라 해도 많은 변종이 존재한다. 또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나라마다 그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역내에서 가장 큰 경제를 보유한 중국,

국민소득 수준은 낮지만 또 하나의 잠재적 거인으로 부상 중인 인도가 그런 경우다. 하지만 각자의 일정한 특수성을 보유한 채 유사한 과정들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자국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는 저임금과 매우 높은 투자율에 힘입은 바로서, 사회기반 시설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이런 전략은 사회 불평등 및 환경문제를 낳기는 했지만 20년 이상에 걸쳐 꽤 성공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전체 금융거래의 85% 이상을 담당했던 네 개의 대형 공공은행을 통해 금융자원의 배분을 통제·지시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공 배경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2008~2009년 글로벌 위기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이로써 중국 경제가 서구 선진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디커플(탈동조)’된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 충격은 비교적 미미했고 회복도 빨랐는데, 중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놓치지 않으면서 다른 성장 엔진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 및 투자배분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중국 당국은 국민총소득 대비 임금 비중을 높여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더 많은 국내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출 주도형 모형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자본 축적을 통해 성장률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팽창을 위해 훨씬 더 높은 부채수준을 (그림자 금융 활동을 통하여) 허용—이는 물론 자산거품을 동반했다—하는 데 명운을 걸었다. 중국의 ‘회복 패키지’는 본질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높은 투자 상태에서 더 많은 투자를 실행하는 식이었다. 지방정부들과 공공 부문의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차입해 각종 기반시설이나 건축물, 더 많은 생산설비에 투자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러한 과잉설비를 돌리기 위해 부동산·건설업계에서 붐이 일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나 ‘그림자 금융’을 통해 조달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중국의 총 부채는 2007년 대비 4배나 증가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도 거의 배로 증가하여 280%가 넘었다. 부동산 거품은 2014년 초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정체되거나 떨어졌다. 그러자 중국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돌렸고 주식시장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 역시 중국 정부의 주도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주가지수는 1년 사이에 두 배로 뛰었고, 올해 6월에 정점을 찍었다. 몇몇 종목의 주가수익비율은 200배를 넘기기도 했다. 상황은 미쳐 돌아가고 있었지만 대응은 어수선했다. 어쩌면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지금 중국 증시에서 주식은 고점에 비해 40%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수준조차도 중국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폭락 현상을 틀어막은 덕분이다.

이 모든 과정은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성장 둔화를 겪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8%가량 줄었고, 제조업 생산과 일자리도 감소세에 있다. 건설투자도 거의 정체 상태인데, 국토 곳곳에서 증식되고 있는 ‘유령도시들’이 이를 말해준다. 이자율 인하와 같은 경기진작 조치도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하도 ‘시장 친화적’ 조치로 위장되긴 했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중국 수출의 추동력인 선진국들로부터의 수요는 앞으로도 부진할 전망이다. 중국 통화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서는 자본유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보듯이, 중국 경제의 둔화는 세계의 다른 신흥경제들

을 전염시키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와 태국의 최종상품 생산자와 중간재 제조업자에게 고통이 전염되고 있으며, 최악의 영향은 중국이 역내의 수출지향적 생산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많은 나라가 부동산·금융자산 거품의 붕괴를 겪고 있고, 그것이 국내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도의 상황은 중국과 또 다르다. 인도는 여전히 일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고 노동인력의 대부분이 농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낮은 활동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점에서 구조변화의 정도가 미미하다. 인도는 성공적인 수출 주도 경제도 아니고, 호황기 내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다.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도의 붐은 다른 지역에서 두드러졌던 부채에 의해 추동된 축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은 도매신용의 급증을 촉발한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고, 부유층 사이에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재정적 양보(세제혜택 등)와 결합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비교적 값싸게 천연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국내외의 투자자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부추겼다. 경제에서 이윤폭이 크게 증가했고 금융활동도 왕성해졌다. 이는 자산가치 상승과 결합해 부유층 및 중간층 계층의 신용을 통한 소비 급증을 가능케 하였다. 전에는 인도 경제의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자극제로써 공공지출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엘리트층과 새롭게 일어난 중간계급들의 부채조달을 통한 주택투자와 사적 소비가 이를 대체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

이 모든 것들은 많은 발전도상국이 두려워하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에 색다른(어쩌면 더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경제성장의 과정

상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임금이 더 낮은 상 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처한 나라들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오늘날 제조과정 전후 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선진국보다는 원재료의 생산 쪽에서 무역경쟁이 치열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이번 강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진국 함정은 많은 중간소득 수준의 나라들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명백한 함정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함정이란 거시경제적 과정뿐 아니라 미래 성장 잠재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자유화를 가

리킨다. 말하자면 금융 자유화는 해당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발전경로를 좋지 않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악영향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과거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진보를 특징짓는 핵심이었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서의 성향이 자유화의 과정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부상(emerging)'의 과정은 환영할 일이 아니며 차라리, 보다 포용적(inclusive) 발전을 포함하는 다른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03 중국의 세계, 세계의 중국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

페이창홍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경제의 GDP 성장률 하락은 새로운 경제적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 중국 국내총생산 하락은 공장 및 기계설비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하락과 상품의 해외수출 감소,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초래되고 있다. 이는 경제 구조의 전환기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제법칙으로, 중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최근 중국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 속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6~8%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높지만 중간수준(high-middle)'의 성장

을 지속하고 있고, 이 흐름은 중국 정부의 기대 범위 내에 있다. 또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여 이제 질적인 측면 및 경제 효율성을 중간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는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도 안정적이다. 더불어 농촌의 생산량과 소득이 개선되고 있어 도농(都農) 간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단위당 국내총생산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도 줄어들고 있다. 투자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 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거시경제 정책으로써 기술과 경제 시스템 및 산업구조의 혁신을 촉진 중이며, 민간 자영업 부문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 구조화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혼합 소유제와 국영기업, 재정과 조세, 은행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지속하면서 행정적 승인 과정의 규제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04 종합 세션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1. 중국 도시화의 전환점 및 새로운 중점분야

교윤령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도시개혁발전센터(CCUD)

지난 15년간 중국의 도시화는 대단위 규모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4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4.7%에 도달했고, 도시 상주 인구수는 7억 5,000명을 초과하였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도시화율은 1.3%로서 매년 2,000만 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658개 도시와 2만여 개의 진(읍)이 있으며 진(읍)의 평균 인구규모는 1억 1,600만 명에 이른다. 이렇듯 중국의 도시화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도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고속 발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단위 규모의 도시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이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가장 큰 의제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제3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지역별 도시화 격차가 커서, 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발전 수준이 약 10여 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3차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43.4%에 불과하다. 중상위층 소득국가의 서비스 비중은 55.6%로, 중국과 비슷한 도시화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60.9%)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다. 이와 더불어 빠른 도시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공기오염, 교통체증, 부족한 기반시설, 열악한 주택 거주환경, 도시관리 효율 저하, 오수 및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 등은 현재 중국이

해결해야 할 여섯 가지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별 도시 불균형 해소, 제3차 산업군의 발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신형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형도시화 계획은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사람 중심의 도시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약 1억 명 인구의 호적취득 및 정착 촉진, 판자촌에 사는 1억 명 인구의 거주환경 개선,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1억 명 인구 거주지의 도시화 등의 실행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 중국의 도시 발전을 이끌 4개의 중점 분야는 도시 재생, 스마트도시 건설, 저탄소 친환경 도시 건설, 지역 특성 이미지 구축이다. 특히 저탄소 친환경 도시와 스마트도시 건설은 협력 수요가 높다. 오늘날 중국의 3분의 2가량 되는 도시가 저탄소 친환경 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고, 320여 개의 도시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사물지능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글로벌 시장에도 큰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수억 명에 달하는 농민이 도시민으로 바뀔에 따라 수입과 소비가 3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소비를 주도할 수억 명의 중산층이 형성될 것이며, 중국의 저탄소 친환경 및 스마트도시 건설은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자본과 기술 등이 중국 도시화 과정의 수요와 잘 결합된다면 글로벌 경제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히리민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연구센터 부소장

살기좋은도시센터(Centre for Liveable Cities, CLC)는 2008년 6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와 환경수자원부의 주도 아래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식센터로서 설립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부소장인 히 박사는 지속가능한 싱가포르를 위한 비전과 계획을 담고 있는 '2015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청사진(Sustainable Singapore Blueprint 2015)'을 소개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싱가포르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인 '탬파인스 마을 재구상하기(Reimagining Tampines)'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2015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청사진'의 비전은 살기 좋고 사랑스러운 주거환경,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활동적으로 자애로운 커뮤니티이다. 각각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형 장소 만들기, 지속가능한 발전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제로 웨이스트, 선도적인 녹색 경제, 에코스마트(eco-smart) 마을, 카라이트(Car-Lite) 싱가포르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달성할 여섯 가지 목표와 18개의 세부 지표들도 마련되어 있다. 여섯 가지 목표는 녹색 및 수변공간 증대, 이동성 확대,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대, 대기 환경 개선, 배수시설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에는 수직 녹지 규모를 61ha에서 200ha로 확대, 자전거 보행로를 230km에서 700km로 연장, 녹색 인증 건물을 21.9%에서 80%로 향상, 녹색 자원봉사자를 1,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확대 등 구체적인 지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사례 중 하나가 '탬파인스 마을 재구상하기'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구도심 지역인 탬파인스 시범 개발지역과 그 지역사회에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약 25만 명의 거주민이 사는 탬파인스 마을은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지역이면서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다. 하지만 교통 체증이 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달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2017년까지 지하철을 연장하여 3개 정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탬파인스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지역위원회, 자문위원, 민간 활동가, 싱가포르대학교 건축학과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이들의 각종 지역조사와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시민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세부 계획이 마련되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고자 보행환경 개선 방안, 녹지 및 수변공간 확대 방안, 커뮤니티 활동공간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참여와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탬파인스 마을 재구상하기' 프로젝트는 보다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사람의 중요성이 돋보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본 간사이 지방 사례

이시하라 가즈히코
일본 리츠메이칸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일본은 2004년부터 인구 감소가 나타나면서 2015년부터는 가구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로써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

시의 위축을 야기했고, 늘어난 빈집들은 소비 약화와 치안 분야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도시 위축 시기엔 '콤팩트 시티(compact cities)'와 같은 공간적 측면에서의 정책뿐만 아니라 쇠락지역 지원을 위한 새로운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1960년대 시작된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마치즈쿠리란 지역사회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가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과 장점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교토, 오사카, 고베 등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치즈쿠리 운동을 소개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개발만은 충분치 않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관리 방안이 중요한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4. 시민 참여를 통한 행복한 자치시 만들기 :

시흥 아카데미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지방자치 시대 20주년을 맞이해 국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새로운 도시 발전·재생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구 40만의 경기 시흥시는 '지속가능성'을 열쇳말로 하는 새로운 도시 만들기가 한창이다. 시흥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참여·협력·조정·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꾀한다. 지역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작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을 지역사회의 리더로 양성하는 부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시흥시는 시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35개 과정을 개설 및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 시대의 선진 복지모델 연구를 위한 '스웨덴 학교',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백년정원학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백세건강학교' 등이 대표적 교육 과정이다. 시흥 아카데미에서 눈여겨볼 점은 해당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이 실제 지역사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 정원사, 공원 관리자, 치매예방 활동가, 마을 기획자, 시민 기자단으로서 시정에 참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3개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시흥 아카데미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의 전문성, 안정적인 거버넌스,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시흥 아카데미의 총괄 책임자인 학교장을 경력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대학과 같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시흥시장은 총장, 시흥시 기획처장은 총괄부서장을 맡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흥 아카데미는 각각의 강의 내용을 고화질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공개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35개 과정에서 420개의 콘텐츠가 생산됐고, 현재 14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5. 충남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천 노력과 과제 :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정책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정책적으로 선도하고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민선 5기와 6기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정의 최고 목표로 삼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정책 사업들을 시행해왔다. 또한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는 수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중시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도청 기획조정실 산하 조직인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민간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행정의 구체적 목표 제시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양적인 경제성장 대신 지역사회 및 지역환경과 조화하는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지역 차원의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도랑 살리기 운동, 금강 비전 수립 및 금강 하구둑 구조개선 노력, 서해안 비전 수립과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노력,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 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추진 과정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행정 간의 신뢰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이 실효성을 거

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권한과 책임 또한 주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경제·환경·에너지 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환경과 생태자원에 대한 통제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는 지역 단위의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실현, 특히 자치분권과 풀뿌리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충청남도는 지역환경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자치 주권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이 함께 강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